

북한의 시장 경제화 규모 추정과 평가

신 힘 철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북한의 개혁·개방과 7·1조치

어느새 우리에게 ‘북한’ 하면, ‘경제난’이 떠오를 정도로 북한의 경제난은 이미 만성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북한 당국의 시도도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72년에서 1980년대 후반에 걸쳐 행해지던 무역 확대와 제한적 외자 유치 단계를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였으나, 석유 파동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무역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말았다. 두 번째 시기는 1991년부터 시행한 제한적 경제특구 단계이다. 당시 동북아 중개 무역의 요충지를 건설하고자 야심차게 시작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미미한 외국인 투자로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 그 후 세 번째 시기가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1조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가격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격 평균 25배 상승: 최소 7배(세수비누), 최고 550배(쌀) · 임금 평균 18배 상승: 부문·기능에 따라 차등 인상 · 환율 평가 절하: 1달러당 2.1원 → 145원
중앙계획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경영 자율권 및 재정 운용권 확대 ·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기업 자체적인 가격 설정 가능, 기업 중심의 무역 ·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
실적에 따른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에 임금이 연동되는 '변수임 지표'*를 도입 · 농업에서도 개인 경작을 일부 허용하고, 목표 생산량 초과분은 자체 분배 허용

주 : 변수임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제한 비용(임금은 포함)을 뜻함. 변수임에는 비용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의 유인을 주고, 일정 비율에 따라 국가 분배 몫, 기업소 자체 분배 몫, 임금(생활비)로 나뉘기 때문에 실적과 임금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이러한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한 파격적인 경제 개혁의 배경으로는 주민 경제 보호와 공식 부문의 회복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부족 현상의 심화로 생필품은 대부분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에 이른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황 하에서 암시장이 성행할수록 국정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공급자는 암시장에서 판매할 유인이 점점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중앙 계획 경제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자 부분적인 시장의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 방향'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시장 경제의 부분적인 도입을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시작이기보다는 계획 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일시적인 방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말 배급제 확대, 땀기발 경작 단속, 장마당 단속과 같은 계획 경제를 다시 확대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를 다시 계획 경제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

듯 당국의 의도와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북한의 시장 경제 부분을 비공식경제의 추정을 통해 알아보고, 북한 경제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장 경제 규모 추정

북한 경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미시적 설문 조사를 이용한 방법과 거시 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하지만 미시적 방법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에 샘플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탈북자의 배경에서 오는 차이로 인하여 일관된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 추정을 시도한다. 변수간의 관계를 이용한 방법역시 기본적인 데이터의 부족과 통제된 경제 구조로 인하여 변수들 간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이러한 단점을 많은 부분 보완한다고 판단된다. 전력 사용은 경제의 공식 부문 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의 활동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즉, 공장 생산품 중 일부가 암시장에서 거래된다면, GDP에는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한 생산품만 기록이 되겠지만, 이 GDP는 실제 생산은 되었지만 비공식 부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누락된 축소된 GDP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을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전체 GDP를 추정하고, 여기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GDP를 차감하면, 생산은 되었지만 공식 경로를 통해 거래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의 GDP 크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진국과 경제 발전이 진행 중인 나라를 포함한 시장 경제가 발전된 많은 나라들은 전력 사용량과 GDP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 1980~2005년, 전력 소비와 GDP의 상관 관계 분석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브라질
상관계수	0.9615	0.9833	0.9485	0.9488	0.9904	0.9551

이러한 점은 동유럽의 체제이행 국가들과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베트남, 헝가리, 폴란드의 전력 소비와 GDP의 상관 관계 변화 〉

	베트남	헝가리	폴란드
1980~1990년의 상관계수	-0.4151	0.6460	0.3012
1991~2005년의 상관계수	0.9654	0.9045	0.9315

위의 표에서 종전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 전력 소비와 GDP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아졌다. 실제로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서며 체제이행을 시작하였고, 1986년에 도이모이 정책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은 과도기를 거쳐 1990년대 들어 시장 경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기간 전의 198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 세 나라의 전력 소비와 GDP 간에는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은 되었지만, 공식적인 경로로 유통되지 못한 비공식 부문에서의 거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 헝가리, 폴란드의 GDP 추정식들 중 사회주의의 배경에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발달한 1991~2005년의 베트남 회귀식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제도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는 현재 북한의 상황과 가장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1991~2005년 베트남의 GDP 추정식을 통하여 북한의 추정 GDP를 계산하기로 한다. 사용된 전력 소비량 데이터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이 데이터 자체가 비공식 부문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 북한 경제의 비공식 부문 추정 〉

연도	발전량 (10억 kWh)	GDP (10억 \$)	추정 GDP (10억 \$)	비공식 GDP (10억 \$)	비공식경제 비율 (%)
1990	27.7	23.2	35.29	12.09	52.10
1991	26.3	22.9	33.87	10.97	47.92
1992	24.7	21.1	32.26	11.16	52.88
1993	22.1	20.5	29.63	9.13	44.54
1994	23.1	21.2	30.64	9.44	44.53
1995	23.0	22.3	30.54	8.24	36.95
1996	21.3	21.4	28.82	7.42	34.69
1997	19.3	17.7	26.80	9.10	51.43
1998	17.0	12.6 ¹⁾	-	-	-
1999	18.6	15.8	26.10	10.30	65.16
2000	19.4	16.8	26.90	10.10	60.14
2001	20.2	15.7	27.71	12.01	76.51
2002	19.0	17.0	26.50	9.50	55.88
2003	19.6	18.4	27.11	8.71	47.32
2004	20.6	20.8	28.12	7.32	35.17
2005	21.5	24.2	29.03	4.83	19.94
2006	22.5	25.6	30.04	4.44	17.32

주: 1) 발전량과 GDP 통계는 한국은행 자료 이용
 2) 추정 GDP=(a×발전량)+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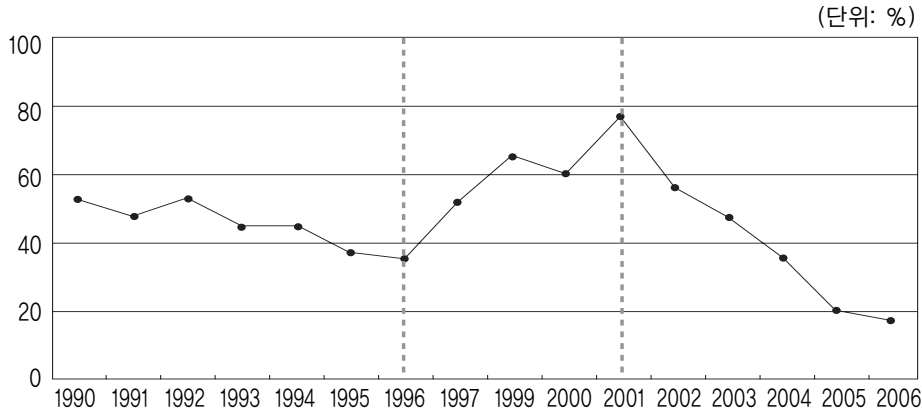
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여 발전과 동시에 사용되는 특성과 북한이 전력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전력 소비량 대신 발전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비공식경제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나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율은 GDP 대비 평균 46.41%이고, 가장 최근인 2006년은 GDP 대비 17.32%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다음의 그래프를 북한의 경제상황과 비교하며 살펴보자.

1990년에서 2006년 동안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추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1) 1998년은 달러화 표시 GDP가 전년에 비해 2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상황을 살펴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치로 간주하고 추정에서 제외시킨다.

〈 북한의 비공식 부문 경제 비율 변화 추이 〉



할 수 있다. 먼저, 1990년에서 1996년까지 약간씩 지속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 시기는 북한 경제난이 시작된 기간으로 추정 GDP는 65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공식 부문이 20억 달러, 비공식 부문은 45억 달러 감소했다. 즉, 경제난이 시작된 이 기간 동안은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시장이 모두 축소되었다.

두 번째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북한 경제난이 절정에 달한 시기로 공식 부문에서는 GDP가 20억 달러 감소하고, 비공식 부문에서는 30억 달러 증가하면서 GDP대비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7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지속된 경제난으로 계획 경제가 1995년 들어 거의 작동하지 못하면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 알려져 있는데²⁾ 이를 반영하듯 공식 부문이 크게 줄어들고, 그 대신 비공식 부문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001년 정점 이후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77%에서 17%로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공식 부문의 GDP는 90억 달러 증가한 반면, 비공식 부문의 GDP는 75.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에 시작된

2) 이영훈, 「이행기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시장화를 중심으로」, 참여사회연구소, 200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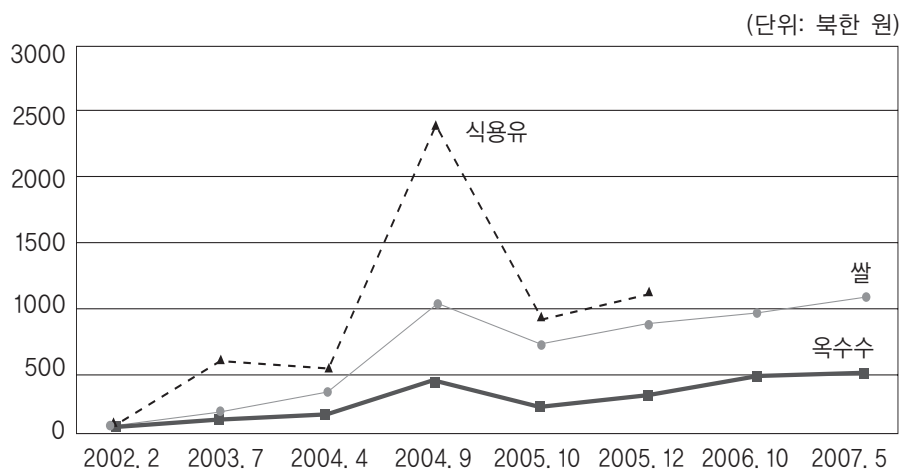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7·1조치로 인하여 암시장에서 행해지던 거래를 국가가 합법화시킴으로써 비공식 부문에서 존재하던 75.7억 달러의 GDP가 공식 부문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7·1조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공식경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비공식경제와 지하경제 부분만이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부문 내에서도 시장화는 진행된다.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생필품 가격의 인플레이션 발생

북한 경제의 변화상으로 먼저,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다. 7·1조치 이후 생필품 가격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다.

〈 7·1조치 이후 생필품 가격 변화 〉



●—● 쌀	47	156	350	1,000	705	850	950	1,050
■—■ 옥수수	32	116	150	400	222	286	430	460
▲-▲- 식용유	78	553	475	2,400	905	1,088	-	-

자료: 최수영,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7, p. 8 재구성

북한의 생필품 가격은 2004년 말까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2005년에는 잠시 하락한 뒤 다시 200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개혁 초기의 급격한 상승은 7·1조치가 발표됐을 때 국정 가격의 급격한 증가와 국정 환율의 변화로 기업 및 가계의 자본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본 수요는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고, 동시에 기업 간 현금 결제가 허용되는 등의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하지만 2005년은 북한 당국이 배급제를 강화하고, 종합시장을 단속하는 등 7·1조치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통화량 조절이 더해져 2005년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물가는 상승하였는데, 이는 공급 부족(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의 계획경제 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장 이용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 수입 증가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02년 재정 수입은 1994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재정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재정수입의 증가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먼저 7·1조치의 시행으로 더 이상 당국이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자 북한 당

< 북한 재정의 변화 >

(단위: 북한 억 원)

연도	1994	2002	2003	2004	2005	2006
재정수입	416	223	3,323	3,375	3,917	4,092

자료: 최수영,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7, p. 11 재구성

주: 북한은 2002년 이후 가격조정을 실시

국은 재정 수입의 증가를 위하여 조세 제도를 꾸준히 변화시켜 재정 수입 증가를 도모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 당국의 규제에서 다소 벗어난 개인과 기업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재정 수입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부분 활동 증가

또한 7·1조치 이후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활동은 서비스업인데 그 변화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 북한 서비스업의 명목 GDP 〉

(단위: 10억 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비스업 GDP	6,046	6,150	6,438	6,732	7,173	7,668	7,966	8,181	8,43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남한의 화폐로 환산한 서비스업의 명목 GDP는 2002년 이후 1조 7,000억 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 역시 북한 주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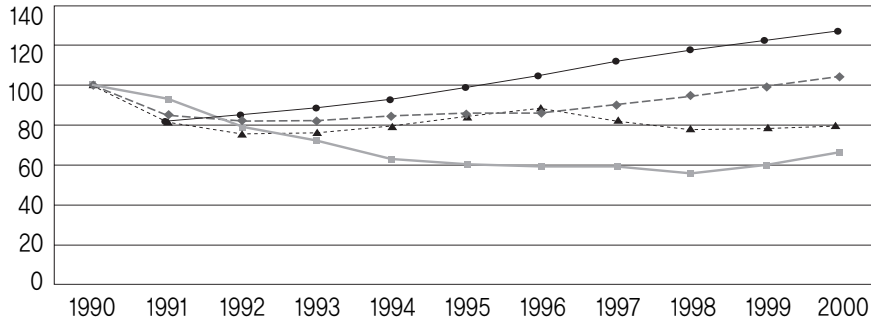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변화상을 고려할 때, 7·1조치 이후 비공식 부문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비공식 부문이 공식 부문으로 전환되면서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경제 시장화의 평가 및 시사점

동유럽 체제전환국보다는 시장화가 안정적 진행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은 7·1조치 이후 계획경제에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살

〈 체제이행 시작후 동유럽 주요국의 실질 GDP 변화 〉



---◇--- Hungary	100	85	82.4	81.9	84.4	85.6	86.8	90.7	95.1	99.1	104.2
—●— Poland	100	82.2	84.4	87.6	92.1	98.6	104.5	111.7	117.1	121.8	126.7
---▲--- Romania	100	82.2	75	76.2	79.2	84.8	88.2	82.8	78.8	77.9	79.6
—■— Russia	100	92.2	78.8	71.9	62.8	60.2	58.1	58.9	55.7	59.2	65.2

자료: Economic Survey of Europe (<http://www.unece.org/ead/survey.htm>)
 주: 체제 이행을 시작한 1990년의 GDP 기준으로 하여 환산

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계획경제에서 시장 경제 부문을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오히려 북한은 동유럽의 체제이행국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유럽의 체제이행국들은 체제이행을 시작하면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가장 빨리 회복한 폴란드의 경우 5년이 걸렸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루마니아의 경우 80%, 러시아의 경우 65% 수준의 실질 GDP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물가 수준도 동유럽의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속도로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다음의 표를 통해 동유럽의 주요 체제이행국들의 경우 10%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때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4년에서 8년 정도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유럽 체제이행국들의 경험과 북한의 주요 생필품가격 변화를 아래의 표를 통

〈 주요 체제이행국 인플레이션 〉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헝가리	34.2	21.6	21.1	21.2	28.3	19.8	18.4	13.5
체코	56.7	12.7	18.2	9.7	7.9	8.6	10.0	9.0
불가리아	333.5	79.4	63.8	121.9	32.9	310.8	578.5	10.0
폴란드	585.8	70.3	44.3	29.4	21.6	18.5	13.2	10.0
러시아	-	2506.1	840.0	204.4	128.6	21.8	10.9	189.0

자료: Raiser, Martin et al. "Statistical Review", 『Economics of Transition』,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8, Vol. 6., No. 2, p 545

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7·1조치가 발표된 2002년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07년에 10%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물가 안정 속도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동유럽 국가들 중 체코를 제외한 다른 4개국 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 7·1조치 이후 생필품가격 변화율 〉

(단위: %)

구분	단위	2003.7	2004.4	2004.9	2005.10	2005.12	2006.10	2007.5
쌀	kg	231.91	124.36	185.71	-29.5	20.57	11.76	10.53
옥수수	kg	262.5	29.31	166.67	-44.5	28.83	50.35	6.98
식용유	병	608.97	-14.10	405.26	-62.29	20.22	-	-

자료: 최수영,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7, p. 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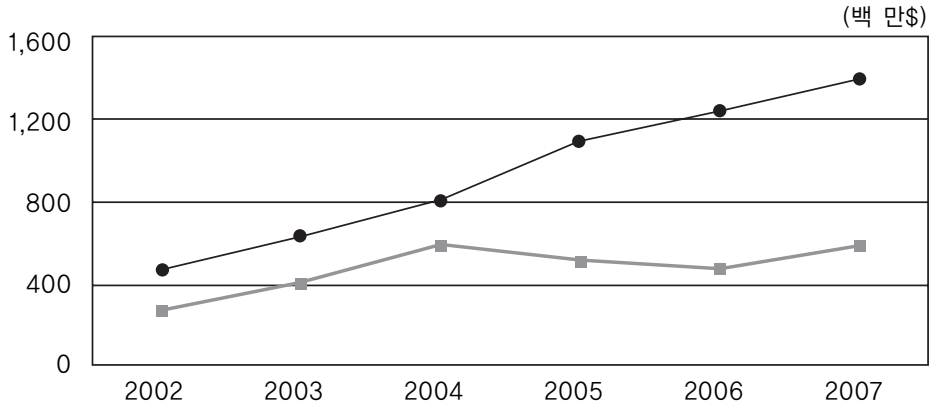
주: 2003년 7월은 2002년 2월 기준이며, 그 이후는 전기대비 증가율임

한·중의 대북 지원과 경험의 공급 부족 완화 기여

하지만 북한이 개혁 초기에 기록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소 부정적이다. 먼저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對중국 수입이 확대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2002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출도 증가하였지만, 그 보다는 수입의 급증이 눈에 띈다. 북한의 부족한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남한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중

〈 북한의 對중국 무역 변화 〉



■ 수출	271	395	586	499	468	582
● 수입	467	628	800	1,081	1,232	1,392

자료: KOTRA, 『2007,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8. p. 10 재구성

무역 의존도는 2002년 32.6%에서 2005년에는 52.6%, 2007년에는 67.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³⁾

또한 이 기간 동안 남한의 대북 지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02년은 2001년에 비해 대북 지원이 1,500억 원 증가하였고, 이후 이 규모는 지속되면서 남한은 매년 3,000억에서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 남한의 대북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부 차원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96	3,808
민간 차원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20
총액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자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3)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각 호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 시장화의 보완 수단

이렇듯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7·1조치 이전에는 지하 경제의 모습이었으나, 현재는 상당부분이 공식 부문으로 흡수되었고, 지금도 시장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7·1조치 이후 현재까지 북한 경제는 동유럽의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했을 때,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등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많은 부분은 남한과 중국의 대북 지원과 무역에서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 확대는 물론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7·1조치 이후의 경제 성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축적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소수의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무역 확대를 통하여 자본 축적과 기술 도입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 가장 쉽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대는 남한일 것이다.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은 저임금 노동력을 통한 단순 교역에서 벗어나 기술 및 자본 축적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에 자본과 기술이전, 물자공급 등을 통해 시장 경제화 진전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남북한 각각의 비교우위를 결합한 남북 경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단위: 1,000 \$)

	2005	2006	2007	2008. 1~9
생산	14,906	73,737	184,779	186,482
수출	866	19,825	39,669	28,966

자료: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원회 (<http://www.kidmac.com/>)

2007년 북한의 GDP와 비교했을 때, 개성공단의 생산량은 7%, 수출량대비 개성공단의 수출량은 4%로 공단이 가동된 지 3년째임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12·1 출입 제한 조치와 같이 정치 변수가 쉽게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은 개성공단의 큰 리스크 요인이다. 개성공단의 가동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남한 정부에서도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을 확실히 구분하여 경제 협력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점차 신뢰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성장, 북한 경제 시장화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